

政策討論會

減價償却政策의 改善方向

1994. 5

韓國租稅研究院

政策討論會 日程

- 0 정책토론회명: 참가상각정책의 개선방향
- 0 일시: 1994년 5월 10일 (화), 10:00 - 1:00
- 0 장소: 한국조세연구원, 대회의실
- 0 사회자: 박종기 (한국조세연구원장)
- 0 토론자 (가나다순):
 - 곽진업 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 곽태원 교수 (서강대)
 - 김완석 교수 (강남대)
 - 신찬수 공인회계사 (한선험동회계사무소)
 - 최경선 이사 (대한상공회의소)
 - 최외홍 부장 (삼성전자)
 - 표학길 교수 (서울대)
 - 한정기 과장 (재무부 법인세과)
- 0 진행순서:
 - 10:00 - 10:10 : 사회자말 (박종기 한국조세연구원장)
 - 10:10 - 10:20 : 주제발표
“가상각정책의 개선방향”
신권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 10:40 - 12:30 : 정토론자 토론
 - 12:30 - 12:50 : 객석토론
 - 12:50 - 1:00 : 종합정리

政策討論會

減價償却政策의 改善方向

玄鎮權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目次

- I. 減價償却의 規模 및 重要性
- II. 減價償却의 特性
- III. 減價償却制度의 國際間 比較
- IV.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한 考察
- V. 現行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 VI.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 VII. 減價償却 政策의 改善方向

I. 減價償却의 規模 및 重要性

1. 減價償却의 規模

- 1992년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이 약 98%를 차지하고, 이중 기계분 자산이 58%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의 구성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건물분	기계분		
비율	100%	39.7%	58.2%	2.1%	

자료: 한국은행(1993)
 건물분: 건물, 구축물
 기계분: 기계장치, 차량, 선박, 운반구

- 199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총액은 122.7조원에 달하고, 이 규모는 GNP의 53.4%를 차지함. 이 고정자산에서 1992년 한해의 감가상각 총액은 15.9조 원이며 이는 GNP의 6.9%를 차지하며, 전체 고정자산에서 13%가 한해의 감가상각액임. 감가상각은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으로 나뉘며 일반상각이 전체 감가상각액의 약 92%를 차지함.

<표 1-2> 감가상각액의 규모

	고정자산	총감가상각 (A+B)	일반상각 (A)	특별상각 (B)
총액(십억원)	122,745	15,941	14,686	1,255
GNP 대비(%)	53.4	6.9	6.4	0.5
고정자산 대비(%)	100.0	13.0	12.0	1.0
총감가상각 대비(%)	-	100.0	92.1	7.9

자료: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 일반상각을 자산종류별로 나누어 규모를 살펴보면, 기계분 자산의 일반상각액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기계분의 내용년수가 짧아 감가상각액이 훨씬 크기 때문임.

<표 1-3> 일반상각액의 자산별 규모

	일반상각	기계분	건물분
총액(십억원)	14,686	12,737	1,948
일반상각대비(%)	100	86.7	13.3

자료: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 자산별 감가상각률을 살펴보면, 기계분 자산의 경우는 일반상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3%를 보여주고, 특별상각이 모두 기계분 자산에 의한다는 가정 하에 포함시키면 약 20%를 차지함. 반면 건물분 자산의 감가상각률은 4.8%를 보여 줌.

<표 1-4> 유형자산 대비 감가상각률

기계분 감가상각률		건물분 감가상각률
일반상각대비	특별상각포함 대비	일반상각대비
18.33%	20.14%	4.79%

자료: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 감가상각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 199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자금규모는 94.27조원이며 이중 자기자금은 45.5%를 차지하고 있음. 감가상각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자금과 비교할 때 약 15.6%를 보여주고, 자기자금과 비교할 때 약 34% 규모를 보여줌.

<표 1-5> 원천자금 대비 감가상각액

(단위: 십억원)

자금	자기자금	타인자금	감가상각액	감가상각액의 비율	
				전체자금대비	자기자금대비
94,271 (100%)	42,851 (45.5%)	51,420 (55.5%)	14,686	15.58%	34.27%

자료: 한국은행(1993)

2. 業種別 減價償却의 規模

- 자산종류별로 전체 자산액에서 각 업종이 소유한 비율을 살펴봄. 제조업이 전체 고정자산 및 유형자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무형자산은 57%를 보여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줌. 타업종에 비해 제조업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수 창고 및 통신업과 전기 가스 및 증기업이 타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표 1-6> 업종간 자산의 분포실태

(단위: %)

업종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건물분	기계분		
1. 어업	0.4	0.4	0.2	0.6	0.2
2. 광업	0.8	0.7	1.0	0.5	5.9
3. 제조업	60.8	60.9	61.3	60.6	56.6
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10.0	10.2	16.3	6.1	2.4
5. 건설업	3.0	2.8	4.1	1.9	15.0
6. 도소매, 숙박업	7.0	7.0	10.7	4.5	5.7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6	16.8	4.1	25.5	7.1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7	0.7	1.5	0.2	1.7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0.6	0.5	0.9	0.2	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1993)

- 전체 감가상각액을 업종별로 분포한 형태를 살펴 봄. 제조업이 전체 감가상각액의 약 63%를 차지하고 일반상각은 64%를 보이고 특별상각은 53%를 보여줌. 그러므로 제조업이 자산규모에 비해 특별상각의 비중은 높지 않음.

<표 1-7> 유형자산에 대한 업종별 감가상각의 분포실태

(단위: %)

업종	총감가상각	일반상각		특별상각
		기계분	건물분	
1 어업	0.58	0.63	0.17	0.03
2 광업	0.63	0.61	1.04	0.87
3 제조업	63.45	64.37	64.99	52.76
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9.78	9.28	20.33	15.73
5 건설업	3.62	3.23	6.12	8.14
6 도소매, 숙박업	4.47	4.03	8.14	9.60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6.56	16.96	3.07	11.87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47	0.46	2.05	0.58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0.42	0.42	1.35	0.4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 업종별로 나누어 기계분 및 건물분 자산의 감가상각률을 살펴봄. 제조업에서 보유한 기계분 자산의 감가상각률은 일반상각만을 계산하면 19%를 보이고, 특별상각을 모두 포함할 경우는 약 21% 수준을 보여줌. 반면 건물분의 경우는 약 5%를 보여 줌. 제조업의 자산별 감가상각률은 전체수준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줌.

<표 1-8> 유형자산 대비 업종별 감가상각률의 실태

(단위: %)

업종	기계분 감가상각률		건물분 감가상각률
	일반상각	특별상각포함	
1 어업	19.83	19.93	5.25
2 광업	18.52	21.41	4.84
3 제조업	19.23	20.78	5.06
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1.90	26.37	5.91
5 건설업	25.10	32.32	6.98
6 도소매, 숙박업	14.54	18.58	3.67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14.40	15.28	3.63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3.79	30.01	6.53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25.74	29.49	7.21
합계	18.33	20.14	4.79

자료: 한국은행(1993), 국세청 내부자료

- 감가상각이 업종별 재무구조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봄. 제조업의 감가상각이 전체자금 및 자기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5%와 58.5%로 전체수준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9> 업종별 감가상각액의 원천자금 대비비율 (단위: %)

업종	자기자금 비율	감가상각액의 비율	
		전체자금대비	자기자금대비
1 어업	37.34	79.83	213.79
2 광업	34.00	22.18	65.22
3 제조업	47.02	27.50	58.48
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57.23	29.62	51.76
5 건설업	25.92	5.99	23.10
6 도소매, 숙박업	28.90	9.33	32.30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5.18	46.51	71.35
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5.30	13.50	29.79
9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38.41	23.42	60.96
합계	45.45	15.58	34.27

3. 減價償却 政策의 重要性

- 감가상각이 법인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나, 그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는 매우 낮음. 그러므로 우리나라 감가상각 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그 골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음.
 -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법인세율과 감가상각 정책의 변화로 인한 세수변화를 비교하여 감가상각 정책의 중요성을 살펴 봄.
- 0 법인세율이 1% 인하하면 전체 법인세수는 약 2%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줌. 반면 기계자산의 내용년수를 1년 단축하면 세수는 3.2% 감소하게 되며, 기계분 자산의 잔존가액을 5%로 축소하면 세수는 약 7.6% 감소하게 됨.

<표 1-10> 법인세율과 감가상각제도의 세수효과 비교

법인세제	정책변화	세수효과
법인세율	32% -> 31% (1% 인하)	2.2% 감소
감가상각제도		
0 내용년수	기계분 자산 9년 -> 8년 (11% 감소)	3.2% 감소
0 잔존가액	기계분 자산 10% -> 5%	7.6% 감소

- (주) 1. 감가상각제도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하여 구하였음.
- 0 기업은 정율법 방법만을 사용함.
 - 0 새로운 세법은 신규자산에만 적용됨.
 - 0 매출액: 100, 총비용: 95, 감가상각비: 4, 법인세전 순이익: 5
 - 0 초기년도의 자산이 전체자산의 37.8%를 차지함.
(국부조사통계에서 전 산업의 순자산 대비 취득년도의 분포)
2. 기계분 자산의 평균 내용년수는 9년으로 가정함.

- 감가상각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현재의 감가상각 제도는 1951년 제정 이후 그 골격은 변화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현실여건과 비교할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및 사회비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II. 減價償却의 特性

1. 減價償却의 內生的 特性

- “감가상각은 시간이 흘러도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감가상각의 내생적 특성을 의미함.
- 감가상각은 경제 및 경제외적 여러가지 요인 (인플레이, 석유가격 등)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모수(parameter)로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감가상각은 여러가지 외부환경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내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많이 대두하여 감가상각의 특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 감가상각은 내생적 특성을 가지므로 매년 서로 다른 경제환경에 따라 감가상각 수준이 달라질 것임. 이는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2. 經濟的 減價償却과 稅法上 減價償却의 關係

-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이 실제인 경제적 감가상각과 얼마만한 격차를 보일까?
- 세 가지 교통자산을 통해 비교한 결과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보다 1.43 - 1.99 배 높은 수준을 보여 줌.

<표 2-1> 경제적 및 세법상 감가상각률의 비교

	트럭	버스	승용차
경제적 감가상각률 (A)	22.03%	25.87%	26.71%
세법상 감가상각률 (B)	43.8%	36.9%	43.8%
감가상각률의 비교 (B/A)	1.99	1.43	1.64

자료: 현진권(1993)

- 자산별 경제적 감가상각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미국자료를 사용하여 모든 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세법상 감가상각률을 비교함.

- 미국 세법의 감가상각률은 실제보다 6.77배 높은 수준을 보여 준 반면, 우리나라의 세법은 2.78배를 보여주어 미국에 비해서는 세법의 규정이 현실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음.

<표 2-2> 세법상 및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비교

구 분	미국		한국	비교	
	경제적 감가상각률(A)	세법상 감가상각률(B)	세법상 감가상각률(C)	(B/A)	(C/A)
평균				6.77	2.78

자료: Hulten and Wykoff(1981a)의 34개 개별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추정치를 사용하여 구한 평균치임.

- 우리나라의 감가상각 정책은 실제 감가상각과 일치시키는 방향에 가까우나 실제로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과 경제적 감가상각은 차이를 가짐. 자산별 감가상각을 현실과 정확히 일치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름. 그러므로 미국은 세법에서의 규정은 현실과 결별시켰음.

III. 減價償却制度의 國際間 比較

1. 耐用年數

- 내용년수의 세법에서의 규정은 감가상각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됨. 미국은 세법상 내용년수가 세법과는 일치하지 않는 정책방향이므로 자산구분이 간소하고 내용년수가 짧음. 반면 일본은 세법의 내용년수를 실제 경제적 내용년수와 일치하는 정책방향이므로 자산구분이 매우 세밀하고 내용년수가 비교적 김.

<표 3-1> 세법상 내용년수의 특징 비교: 미국과 일본

	미 국	일 본
시각	세법상 내용년수는 경제적 내용년수와는 별개임	세법상 내용년수는 경제적 내용년수와 일치함
자산구분	8 그룹	849개

- 우리나라의 내용년수를 일본과 비교하면, 기계장치는 일본 내용년수의 85% 정도이고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은 97% 수준임.

<표 3-2> 내용년수에 대한 한일간의 비교

자산구분	한국 (A)	일본 (B)	A/B (%)
기계장치	7.97	9.66	82.5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	20.14	20.79	96.6

- 미국에서 ACRS 이전에는 감가상각 정책을 경제적 감가상각에 일치시키는 것임. 그러므로 ACRS 이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가졌으나, ACRS 이후에는 우리나라 내용년수보다 훨씬 짧음.

<표 3-3> 내용년수의 한국 미국간의 비교
(한국의 평균 내용년수/미국의 평균내용년수)

미국세법 종류	Bulletin F (1962 이전)	ADR (1971-1980)	ACRS (1981-1986)	MACRS (1987 이후)
한국/미국	50.9%	70.6%	160%	110%

2. 資産 區分

- 일본은 자산별 경제적 내용년수와 일치시키기 위해 많은 자산구분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은 경제적 내용년수와는 별개의 세법이므로 간단히 8개 그룹으로만 분류하였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일본처럼 경제적 내용년수와 일치하여 하나 자산구분은 일본에 훨씬 못미쳐 자산구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표 3-4> 자산구분의 국제간 비교

국명	기계장치외 자산	기계장치	합계
한국	274개	317개	591개
일본	347개	499개	846개
미국	-	-	8그룹

3. 殘存價額

- 일본은 5%이고 미국은 잔존가액이 없으므로 투자비용이 100% 회수가 가능함. 우리나라는 10%의 잔존가액을 두고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잔존가액 규정은 정율법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게 되므로 필연적임.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면 높은 잔존가액을 규정하고 있음.

<표 3-5> 잔존가격의 국제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잔존가격	10%	5%	0%

4. 減價償却 方法

-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방법은 일본과 같으나 미국은 가속상각(이중체감법)을 허용하여 초기에 비용회수가 가능함.

<표 3-6> 감가상각 방법의 국제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가속상각

- 같은 내용년수(8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방법의 효과를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현행 10% 하의 정률법은 미국의 이중체감법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음.

<표 3-7> 감가상각 방법의 비교

년수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10% 잔가율	5% 잔가율	1% 잔가율		
1년	0.2501	0.3123	0.4377	0.2500	0.2222
2년	0.1876	0.2148	0.2461	0.1875	0.1944
3년	0.1406	0.1477	0.1384	0.1406	0.1667
4년	0.1055	0.1016	0.0778	0.1055	0.1389
5년	0.0791	0.0699	0.0438	0.0791	0.1111
6년	0.0593	0.0480	0.0246	0.0593	0.0833
7년	0.0445	0.0330	0.0138	0.0445	0.0556
8년	0.0334	0.0227	0.0078	0.0334	0.0278
현재가치	0.7492	0.8138	0.8912	0.7490	0.8143

5. 機械裝置에 대한 國際間 比較

- 기계장치는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계장치에 대한 세법규정을 국제간에 비교함.

<표 3-8>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제도의 국제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내용년수	7.97년	9.66년	5년
자산구분	317개	499개	5개
잔존가치	10%	5%	0%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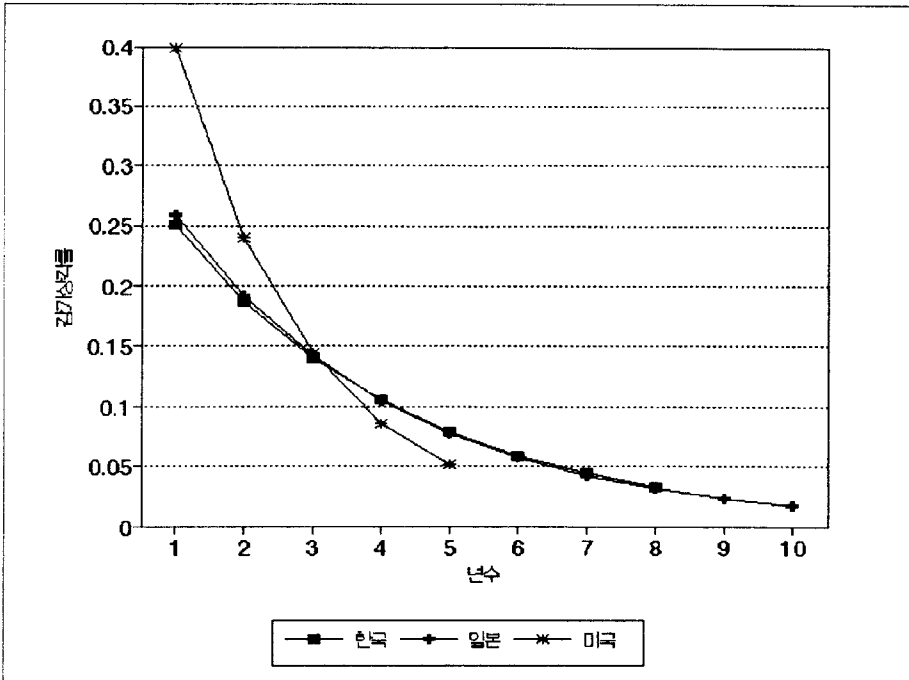
- 기업이 기계장치에 한 단위 투자하였을때 비용으로 회수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으며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러므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회수 측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유리하고 일본이 다음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3-9> 감가상각액 현재가치의 국제간 비교

년 수	한 국	일 본	미 국
1	0.2501	0.2589	0.4000
2	0.1876	0.1919	0.2400
3	0.1406	0.1422	0.1440
4	0.1055	0.1054	0.0864
5	0.0791	0.0781	0.0518
6	0.0593	0.0579	-
7	0.0445	0.0429	-
8	0.0334	0.0318	-
9	-	0.0236	-
10	-	0.0175	-
현재가치	0.7492	0.7782	0.8375

주: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이자율은 10%임.

<그림 4-1> 기계장치 감가상각의 국제간 비교



IV. 減價償却 政策方向에 대한 考察

1.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種類

- 감가상각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임. 즉 중립적 정책방향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바탕을 두며, 수단적 정책방향은 시장실패에 근거를 둠.

- (1) 중립적 정책: 감가상각의 형태를 현실과 일치시키는 방향
- (2) 수단적 정책: 감가상각을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향

2. 減價償却 政策方向의 評價

- 중립적 정책방향이 이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가짐.
 - (1) 기준설정의 문제: 업종별 및 자산별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점
 - (2) 경제적 감가상각의 측정문제
 - (3) 감가상각의 내생적 특성문제
- 수단적 정책방향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며, 서구에서는 감가상각이 수단적 방법으로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책방향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들간의 조화문제(trade-off)가 대두함. 올바른 정책방향이란 우리의 경제가 어떠한 기준에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임.

<표 4-1> 감가상각 정책방향의 비교

기준	중립적 방향	수단적 방향
세수 투자 자원배분 제도 행정비용	안정 중립적 아중립적 복잡함 높음	감소 활성화 왜곡 단순 낮음

- 기업의 투자 분위기에 대해 논의되는 우리의 경제현실과 상승한 노동비용을 고려할때 수단적 감가상각 정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표 4-2> 설비투자에 대한 전년대비 성장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분기	30.7%	16.9%	6.5%	-6.2%
2분기	25.0%	14.4%	-0.1%	-0.9%
3분기	22.7%	7.5%	-3.3%	5.5%
4분기	20.0%	9.9%	-8.2%	3.6%
연간	18.4%	12.8%	-0.8%	-0.5%

자료: 한국은행(1993)

V. 現行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1. 非科學的 政策設定

- 감가상각제도는 정책방향에 관계없이 자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특히 업종 및 자산구분, 자산별 내용년수)는 일본 것을 부분적으로 모방한 후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임. 그러므로 현행 감가상각제도는 객관적,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2. 複雜한 制度

-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서구에 비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행정비용 및 협력 비용이 높음.
 - o 감가상각은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으로 나뉨. 일반상각은 업종별 자산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특별상각은 별도로 특정 자산 및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됨.
- 특히 특별상각은 업종 및 자산별로 선별하여 추가 감가상각을 인정하므로 UR을 비롯한 국제무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폐지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3. 非合理的인 制度

- 비현실적인 내용년수:
 - o 세법상 내용년수는 오래전에 규정되어 변화하는 자산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자산을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함.
- 비현실적 잔존가액:
 - o 폐기자산을 처분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드는 현실을 감안할때 10% 잔존가액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음. 잔존가액은 정을법 감가상각방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나 10%는 너무 높음.
- 비과학적 업종분류:
 - o 기계장치에 대한 업종별 분류는 현행 40개 되어 있으나 이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할 수 없는 체계임. 이로 인해 업종구분에 많은 혼란을 가짐.

- 비합리적 자산분류체계:

o 자산분류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적용이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한 행정비용과 협력비용이 높음.

- 비현실적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한도액

o 현행 30만원 이상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용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낮은 한도액의 설정은 기업에게 장부정리에 부담을 주므로 대폭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VI. 減價償却制度의 經濟的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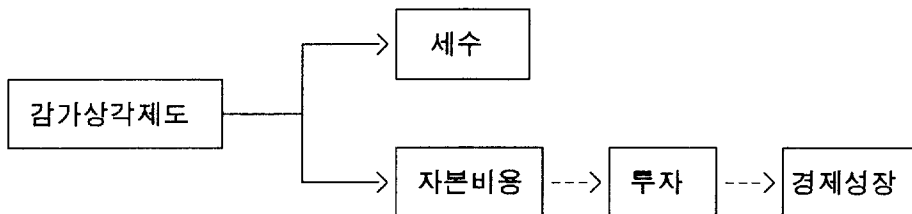
1. 最適 減價償却制度

- “가장 합리적인 감가상각제도란 무엇인가?” --> 최적의 감가상각제도

o 감가상각제도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준 (세수규모와 자본비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 기준은 서로 대치하는 관계에 있음. 그러므로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어느 한 기준을 희생시키고 다른 한 기준을 추가로 얻음으로 인해 사회복지가 증가한다면 이는 합리적 감가상각 정책방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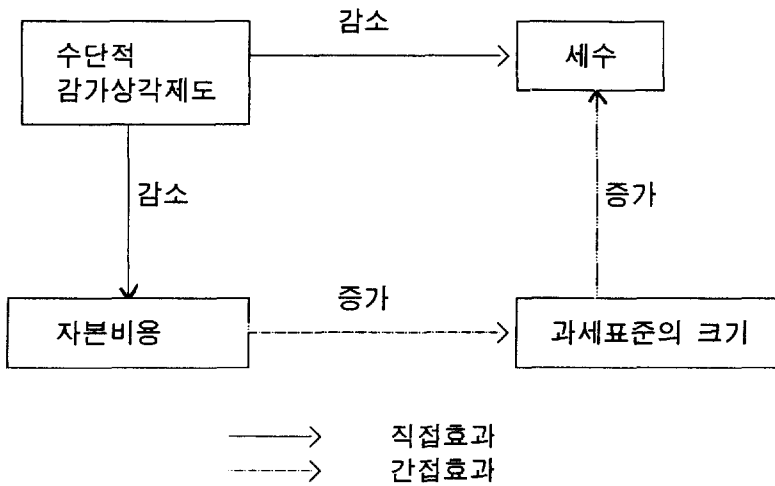
o 두 가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복지를 증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는 비효율적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함 (예: 업종 및 자산종류별 자산구분 등)

<그림 6-1> 감가상각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대상



- 감가상각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눌 수 있으나, 간접적 효과는 직접적 효과에 비해 측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그러나 간접적 효과는 계량화는 힘들으나 이를 염두에 두고 감가상각제도를 평가하여야 함.

<그림 6-2> 감가상각제도의 전체효과



2. 耐用年數의 經濟的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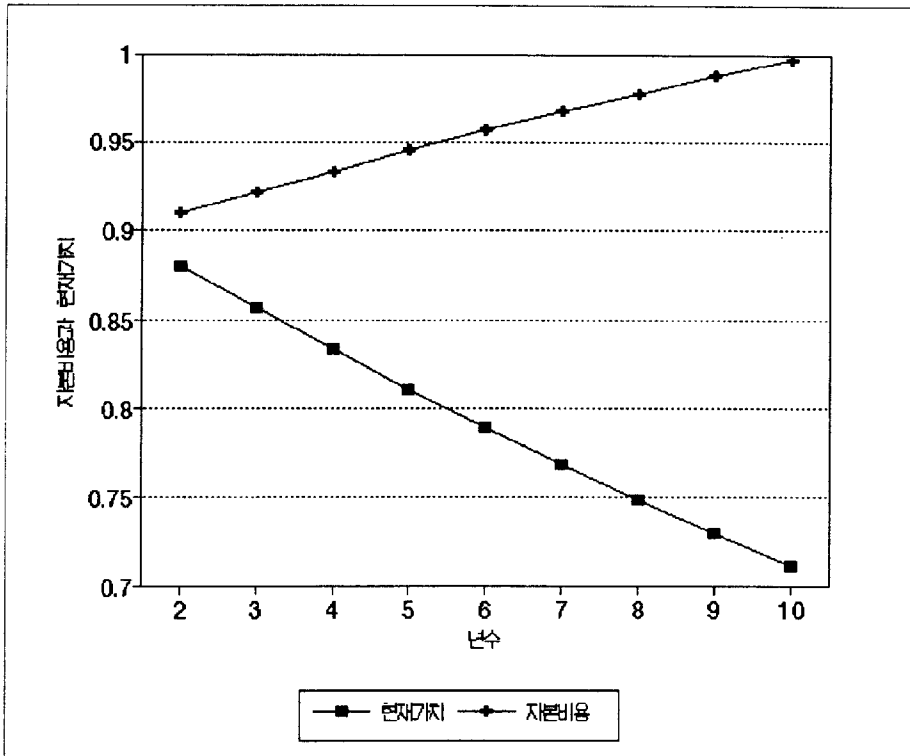
- 감가상각제도는 세 가지 도구 (내용년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감가상각액이 결정됨. 잔존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년수만을 변화시킬 때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음. 여기서 현재가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년수가 다르므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비교하였음.

<표 6-1>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본비용의 변화

내용년수	감가상각률	현재가치	자본비용
2년	68.4%	0.8803	0.9101
3년	53.6%	0.8574	0.9220
4년	43.8%	0.8343	0.9339
5년	36.9%	0.8117	0.9455
6년	31.9%	0.7900	0.9567
7년	28.0%	0.7692	0.9674
8년	25.0%	0.7492	0.9777
9년	22.6%	0.7300	0.9876
10년	20.6%	0.7116	0.9971

주: 감가상각률은 정율법을 가정하여 구한 수치임.
현재가치는 10% 이자율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임.

<그림 6-1>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본비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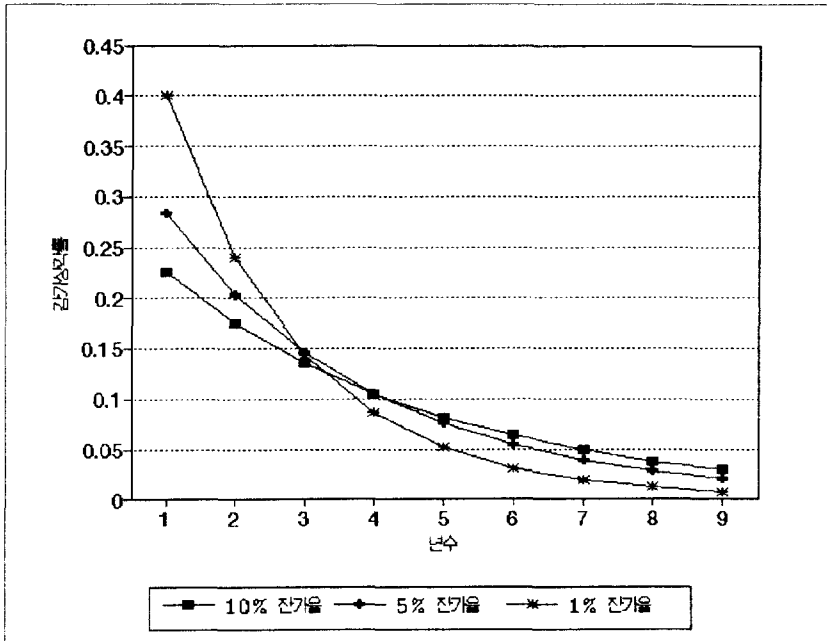
3. 殘存價額의 經濟的 效果

- 잔존가액의 경제적 효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매우 큼. 이는 정율법 감가상각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행 10% 잔존가액의 축소는 초기의 감가상각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표 6-2> 잔존가치의 변화에 따른 감가상각률의 변화

내용년수	감가상각률		
	10% 잔가율	5% 잔가율	1% 잔가율
2년	68.4%	77.6%	90.0%
3년	53.6%	63.2%	78.5%
4년	43.8%	52.7%	68.4%
5년	36.9%	45.0%	60.2%
6년	31.9%	39.3%	53.6%
7년	28.0%	34.8%	48.2%
8년	25.0%	31.2%	43.8%
9년	22.6%	28.3%	40.1%
10년	20.6%	25.9%	36.9%

<그림 6-2> 잔존가액 변화에 따른 감가상각 형태의 비교



4. 政策案의 經濟的 效果

-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단순화한 세 가지 가상안이 감가상각 규모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

- (1) 가상안 1: 내용년수 만을 단축함.
- (2) 가상안 2: 잔존가액 만을 단축함.
- (3) 가상안 3: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가액 폐지, 내용년수를 단축함.

- 세 가지 가상안들의 경제적 효과는 앞에서 보여준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와 자본비용을 통하여 비교함.

가. 내용년수 만을 단축할 경우:

<표 6-3> 내용년수의 경제적 효과

구분	내용년수	감가상각액 현재가치의 변화	자본비용의 변화
기계분	8년	4.2%	-1.0%
	7년	8.7%	-2.0%
	6년	13.4%	-3.1%
건물분	35년	12.7%	-3.1%
	30년	28.6%	-8.3%

(주) 변화율 = $100 * [T(i) - T(b)] / T(b)$,

T(i): 내용년수 i일 때의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혹은 자본비용

T(b): 현재 내용년수 하에서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혹은 자본비용
(기계분은 9년, 건물분은 40년임)

여기서 T는 기계분과 건물분의 기준이 다름.

나. 잔존가액 만을 단축할 경우:

<표 6-4> 잔존가액의 경제적 효과

구분	잔존가액	감가상각액 현재가치의 변화	자본비용의 변화
기계분	5%	9.0%	-3.4%
	1%	20.1%	-7.6%
건물분	5%	17.0%	-3.0%
	1%	45.5%	-8.0%

(주) 변화율 = $100 * [T(i) - T(b)] / T(b)$,

T(i): 내용년수 i일 때의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혹은 자본비용

T(b): 현재 내용년수 하에서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혹은 자본비용
(기계분은 9년, 건물분은 40년임)

여기서 T는 기계분과 건물분의 기준이 다름.

- 10% 잔존가액의 설정은 비현실적이거나 잔존가액의 축소가 감가상각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정율법 하에서 현실적인 잔존가액(1%)으로 변화하기는 매우 힘들 것임.

0 잔존가액을 현실화시키면 정율법 감가상각을 사용하기는 어려움.

다. 정액법 하에서 잔존가액의 폐지:

<표 6-5> 정액법, 잔존가액의 폐지, 내용년수의 경제적 효과

구분	내용년수	현재가치의 변화	자본비용의 변화
기계분	9년	-3.6%	1.4%
	8년	0.5%	-0.2%
	7년	4.8%	-1.8%
	6년	9.4%	-3.6%
	5년	14.2%	-5.7%
건물분	40년	-31.7%	5.5%
	35년	-23.0%	4.0%
	30년	-12.2%	2.1%
	25년	1.4%	-0.2%
	20년	18.9%	-3.3%

(주) 변화율 = $100 * [T(i) - T(b)] / T(b)$,

T(i): 내용년수 i일 때의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혹은 자본비용

T(b): 현재 내용년수 하에서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혹은 자본비용

(기계분은 9년, 건물분은 40년임)
여기서 T는 기계분과 건물분의 기준이 다름.

- 현행제도의 경제적 효과 (세수규모와 자본비용)와 거의 같은 수준의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음.

<표 6-6> 현행제도와 중립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정책대안

자산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액	내용년수	
			평균치	변화율
기계분	정액법	폐지	8년	-11.1%
건물분	정액법	폐지	25년	-37.5%

(주) 현행 평균 내용년수는 기계분은 9년, 건물분은 40년임

- 잔존가액의 폐지와 정액법 하에서 내용년수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6-7>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액 현재가치의 변화율

내용년수	8년	7년	6년	5년
변화율	0.5%	4.8%	9.4%	14.2%

- 이 가상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o 장점: 간편한 제도로 인한 행정 및 협력비용의 감소
 - o 단점: 초기 투자비용의 감소

5. 綜合評價

- 이상의 세 가지 가상안은 각 정책변수를 단순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이러한 가상안을 중심으로 현실과 비교하여 적절한 정책대안을 살펴봄.
- 내용년수의 설정: 감가상각의 내생적 특성과 기업특성에 따라 감가상각을 일률적으로 세

법에서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

0 대안: 세법에서는 기준안을 설정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내용년수를 설정하게 함 (예: 미국의 ADR 제도의 경우 20%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게 함.)

- 감가상각방법의 규정: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행처럼 정액법과 아올러 정율법을 사용하게 할 경우 잔존가액이 문제됨.

0 대안: 현행처럼 정액법과 정율법을 모두 사용하게 함. 정율법을 사용할 경우는 10% 잔존가액 하에서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마지막 해에 잔존가액 10%를 추가로 감가상각액으로 인정하여 100% 감가상각하게 함.

6. 政策代案의 設定

- 이상의 토론을 바탕으로 감가상각 정책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모색함.

0 정책목표: 감가상각제도의 현실화 • 합리화

0 정책수단: (1) 자산별 내용년수의 단축
(2) 잔존가액의 폐지

<표 6-8> 감가상각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정책수단	정책대안
내용년수	0 대안 1: 경제적 내용년수를 세법에서 규정 0 대안 2: 세법에서 내용년수를 규정하고 기업은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용년수를 선택하게 함 ¹⁾
잔존가액	폐지
감가상각방법	0 대안 1: 정액법 만을 사용 0 대안 2: 정액법과 정율법 모두 사용 (정율법을 사용할 경우 10% 잔존가액 하에서 감가상각하고 마지막 해에 잔존가액 10%를 추가 상각하게 함)

1) 내용년수를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한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계속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내용년수의 정책대안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대안 1	대안 2
내용	0 내용년수의 일률적 적용	0 일정범위 내에서 선택
장점	0 제도의 간소화	0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단점	0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	0 제도의 복잡화 0 세수의 감소

- 감가상각방법의 정책대안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대안 1	대안 2
내용	0 정액법 만 사용	0 정액법과 정율법을 사용
장점	0 제도의 간소화	0 현행제도와 유사 0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 0 투자비용의 조기회수
단점	0 투자비용의 조기회수가 어려움 0 기업의 자율성 저하	

- 위 정책대안들은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대폭 증가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임의상각제도는 임의상각에서 강제상각으로 바꾸어도 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임. 강제상각을 통해 제도의 단순화와 회계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음.

VII. 減價償却 政策의 改善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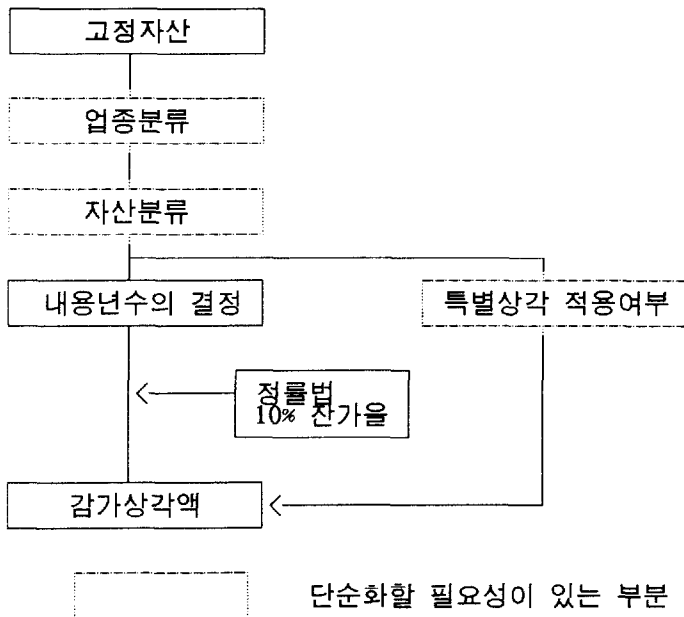
1. 減價償却 政策의 重要性 認識

- 감가상각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중요도에 비해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낮음. 감가상각을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減價償却制度의 單純化 必要性

- 감가상각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현행제도는 대폭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 및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결정하기 위한 업종 및 자산분류는 매우 복잡하므로 대폭 간소화함.
-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으로 이원화한 감가상각제도를 일원화하여 간소화함.

<그림 7-1> 감가상각제도의 단순화 방향



3. 特別償却의 縮小 및 廢止

- 현행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가상각제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UR을 통한 국제무역체계의 변화로 특정업종 및 자산에 대해 선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지므로 특별상각은 점차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o 특별상각을 통한 지원을 일반상각에 흡수하여 업종 및 자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지 하게 함.
- o 현행 법인세법에 있는 자산의 사용시간에 따른 특별상각은 폐지하여 모두 일반상각에 흡수함.

4. 合理的인 制度의 設定

- 현행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는 대폭 개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향 은 다음과 같음.
- o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현행분류의 골격을 유지한 채 개선하면 다음 과 같음. 대분류로 구분할 경우 14개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업종	분류기준	업종수
제조업 그외 업종	중분류 대분류	23개 업종 13개 업종
합계		36개 업종

- o 자산분류: 기술개발 속도에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산분류의 필요성이 있음. 자산분류는 세밀한 분류보다는 큰 그룹으로 대별하여 적용하기 쉽게 하여야 함 .
-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한도액을 대폭 올려 소규모 공구 및 비품은 비용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함.

5. 科學的인 政策樹立을 위한 週期的인 資料 確保

- 고정자산에 대한 기초자료는 매우 부족하므로 감가상각 정책은 비과학적으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술발전 속도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 정책수립이 필요함.
- o 한국조세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기업이 소유한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년수의 조사를 실시하였음 (1994년 4월). 이러한 작업은 향후 3 - 5년 주기로 계속되어야 과학적인 감가상각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